불법 하도급 비위 '복마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광주 학동 붕괴 참사 100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9월16일 발생 100일째를 맞는다.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이번 대형 참사는 무리한 공사, 다단계 불법하도급에 이은 재개발사업 비리 등 복마전으로 이어지면서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업체 등 관련자들이 기소돼,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그 날을 잊지 못하고 있다.

사고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석 달만에 귀국해 구속되면서 붕괴 참사 재개발 비위 등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지난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운전기사와 승객 등 17명이 탄 '운림54번' 시내버스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옆 증심사입구역 정류장에 멈춰 섰다.

철거 공사 중인 지상 5층짜리 상가건물이 버스가 멈춰선 순간, 도로 방향으로 무너졌다.

건물 전체가 기우뚱 쓰러져 잔해에 버스가 파묻히기까지 사고는 찰나에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매몰자 수색에 나섰다.

버스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자동차도 함께 파묻혔는지, 정류장 주변에 행인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구조가 7시간가량 지속됐다.

17명 사상이라는 피해 규모는 잔해를 거두며 버스정류장 주변 수색까지 마친 오후 11시께 최종 집계됐다.

희생자 9명의 장례 절차는 참사 발생 닷새 만에 마무리됐다.

동구청 마당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돼 한 달 동안 참배객 5천773명이 다녀갔다.

건물 붕괴로 이어진 무리한 철거 공사, 다단계로 이어진 불법하도급, 그 배경에 자리한 재개발사업의 복마전 의혹이 참사 직후 제기됐다.

한 달 보름여 진행한 경찰 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을 통해 참사 직접 원인인 건물 붕괴의 경위가 밝혀졌다.

해체계획서를 따르지 않은 철거로 인해 구조가 불안전해진 건물은 속도와 비용 절감에 방점을 둔 공사 방식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내렸다.

굴착기를 조작한 재하도급 업체 대표, 현장 관리를 맡은 하도급 업체 직원, 하도급 업체와 이면 계약을 맺고 공사에 뛰어든 철거업체의 직원, 철거공사 원청인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 소속 직원, 안전 의무를 외면한 감리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 한솔, 재도하급 업체 백솔 등 업체 3곳도 이들 7명과 함께 기소됐다.

관련 재판은 현장검증을 거쳐 최근 순차적으로 공판을 시작했다.

철거 공사장 주변에 남겨둔 버스정류장, 위험성을 지적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행정 등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대목 또한 참사의 과제로 남겨졌다.

5층 철거건물 쓰러져 승객 17명 사상…예견된 인재 지적
관련자 7명 기소 재판…재개발사업 등 수사 '2막' 본궤도

참사 배경에 자리한 재개발사업 복마전과 관련한 수사는 사고 직후 미국으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석 달 만에 귀국해 구속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수사의 '2막'인 재개발 비위 분야에서 업체 알선과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브로커 1명만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간 공사 나눠 먹기, 공사비 후려치기, 단가 부풀리기 등 재개발 비위 의혹과 관련해 18명(1명 기소)이 입건됐다.

유가족은 왜 이러한 비극이 벌어졌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낼 때까지 참사는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철거건물 붕괴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100일 동안 가족을 잃은 슬픔도 추스르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진상규명 목소리를 이어왔다"며 "아직까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비로소 참사가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추석 앞두고 도심 생활 폐기물로 '몸살'

선물 세트 포장재부터 일회용품·음식물까지
"과대 포장 규제·친환경 소비문화 정착 절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각종 생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 방문하기 보다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추석 연휴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곳에는 전날 밤부터 배출된 각종 생활 폐기물 등이 수북이 쌓였다.

과일 선물 상자와 택배 상자가 플라스틱 용기와 함께 뒤엉켜 있었고, 냉동 식품을 담았던 스티로폼과 비닐·종이 포장지 등도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

창고로 쓰이는 쓰레기장 한편에는 사람 키를 넘는 상자탑들이 높게 솟아 있었고, 부피가 큰 폐스티로폼 상자들이 이곳 공간을 가득 메웠다.

아침 일찍부터 정리에 나선 경비원 윤모(67)씨는 "명절이 가까워지니 확실히 선물 세트로부터 나온 상자나 스티로폼 등이 몇 배는 늘었다. 특히, 생선이나 고기 등 음식물과 함께 들어있는 보냉팩을 처리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며 "연휴가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도 산더미같이 쌓일 것이다"고 하소연했다.

시민들도 명절 연휴만 되면 잇따르는 각종 생활 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주부 임모(42)씨는 "명절 선물 박스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은 과대포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몇 개 정리하고 나니 재활용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며 "받자마자 버려지는 포장지, 상자 등이 너무나 많다. 명절 시작도 전에 벌써 이렇게나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면 자원 낭비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명절마다 부각되는 생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과 함께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정은정 광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명절 연휴 기간은 평소보다 포장재나 재활용품 등의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면서 "과대포장에 대해 훨씬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착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기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만큼 명절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는 등 알뜰한 상차림 문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을 지키는 데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명진기자

불법 카메라 설치 유무 점검 광주 북구가 15일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 제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민·관·경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효령노인복지타운 Silver안심순찰대원들이 관내 일곡동의 한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서 위급시 비상벨 작동 상태와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간부 부동산 투기 의혹 장성군청 등 압수수색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장성군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장성군 간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사대는 A씨의 전 근무지, 근무지인 장성군청,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직무 중 취득한 전임 근무지 내 개발정보를 이용해 본인, 가족,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상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현직 공무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조선대병원 파업 철회

조선대병원이 13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상업무에 돌입했다.

15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을 벌이다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루면서 이날 현장으로 복귀했다.

노사는 향후 7년에 걸쳐 환자이송원, 업무보조원, 조리사 및 조리원, 장례지도사, 세탁운반원 등 계약직 150여명의 정규직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계약직 2년, 무기계약직 2년, 고용직(별정직) 3년을 거쳐 관리운영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정 단계 이후에는 승급이 되지 않고 호봉만 오른다.

보건직, 간호직 계약직 25명에 대해서도 1년에 5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화물연대 파업에 파리바게뜨 가맹점 '비상'

"피해 눈덩이" 조속 해결 호소 국민청원

SPC그룹의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빚어진 화물연대 조합원의 파업 여파로 베이커리 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 전국 가맹점 3천400여곳의 빵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업에 참여한 배송 차량은 광주, 원주, 대구, 성남 물류창고 등을 오가는 200대 정도로 전체 차량의 30% 수준이다.

이들 차량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의 물류창고에 있는 생지(빵 반죽)와 빵 제품을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으로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지난 2일 호남샤니 광주공장에서 시작돼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던 호남샤니 광주공장 화물노동자들이 증차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수용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며 화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전국 가맹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광주와 강원도 원주 지역 가맹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말했다.

생지와 빵은 새벽과 낮에 하루 세 번 배송된다. 특히 새벽 배송이 잘 이뤄져야 빵을 구워내 출근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연합뉴스

CMYK